

【특별강연 4】

충청남도 일자리 창출 추진방향

김현철 담당사무관(충청남도 경제산업국)



‘09.10

충청남도 일자리 창출 추진방향

충 청 남 도

I. 최근 고용여건 진단

■ 「고용여건」 6

- 반면에, 고용은 경지후행지수라는 특성과 회복 속도가 느리고 고용 없는 성장의 일반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한계

※ 경기후행종합지수(2005년 100기준)

▷ 2009년 1월(120.2), 2월(119.1), 6월(118.4), 7월(119.8)

-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제공과 인적자원 개발시책을 추진, 지역적으로 고용증대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으나

- 한시적 일자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청년실업자, 취업 단념자 등에게 실질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함
- 또한 중소기업, 벤처기업 등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직면하고 있고 많은 기업은 인력난을 호소
- ※ '08년 기준, 중소기업 인력부족률 2.4% : 16.3만명

- 이러한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업자와 기업의 요구에 부응한 고용정책이 요구됨

II. 충남의 노동시장 수급현황

① 고용현황

(단위 : 천명, %, %p)

구분	2000년	2008년	2009.9월	연평균증감
노동인구	1,459	1,571	1,594	0.9
경제활동인구	916	994	1,016	1.0
취업자	891	967	1,005	1.0
실업자(실업률)	25(2.6)	27(2.7)	27(2.6)	

※ 연도별 청년실업 추이: 06)6.2%, 07)5.6, 08)6.3, '09.8)8.6, '09.8)7.3%
(전국) (7.9) (7.2) (7.2) (8.0) (8.1)

○ 청년 취업 정체 원인

- 청년층의 3D업종 기피
- 대기업, 공공기관, 수도권기업 선호
- 창업 또는 유망 중소기업 취업관련 정보부족 취업포기
- 중앙의 전략산업위주의 집중 지원으로 실업률 해소 미흡
- 지자체 청년실업자 교육의 한계 및 실업률해소 효과 미미

※ 수요자중심 산업인력양성 105명 540백만원(1인5,143천원)

② 인력수급의 특징

〈노동수요〉

○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인구 격차 확대

- 수도권 취업인구 비중 : '95년 45.7% → '07년 49.5%

○ 3차산업 고용비중 점차 확대 추세

- 3차사업 61%, 2차사업 17%, 1차 사업 22%

○ 고기능·고속력 근로자는 증가하고 저기능 저속력 근로자는 점차 감소

○ 임금 근로자중 정규직 비중은 안정적 흐름 유지

- 정규직 비중 변화 : 2000년)55.0% → 2007년)55.7%

〈노동공급〉

○ 경제활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대비 비중은 4.1% 내외로 큰 변동 없음

○ 여성취업자는 2003년 이후 남성취업 증가율 추월(3.4%p:1.0%p)

○ 학력별 고용율은 대졸이상 80.2%, 고졸71%, 중졸이하 55.8%순

○ 연령별로는 청년실업률(8.1%)이 월등하게 높음

③ 최근 고용변화의 시사점

-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제조업(47.4%)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으로 고용 없는 성장 추세 심화
 - 2000~2009년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7.75%씩 성장한 반면, 취업계수 (GRDP 10억원당 취업자수)는 하락
 - ※ 취업계수 : 충남 2000년 30.8 → 2007년 21.3(↓30.8%p)
 - 전국 2000년 36.6 → 2007년 30.1(↓17.7%p)
 - 기술·자본 집약형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생산성은 향상하고 고용 창출력은 낮아진 결과
-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이 전국 평균(54%)을 상회하여 고용의 안정성은 他시도에 비해 양호한 상태임
- 다양한 제조업 유지와 자동화 등 여성취업이 용이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여성취업률 증가
- 청년층의 고용률이 증가(40.7% → 44.5%)하고 있으나 실업률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
- 청년미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, 벤처기업등은 인력난을 호소
- 고용확대를 위하여 여성의 취업알선과 중소기업·벤처기업 등 인력의 mismatch 치 해소 및 취업계수가 높은 서비스업 활성화 필요

III 일자리 창출 시책

- 우리 도는 지역차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1,731억원 (국비 902, 지방비 829)을 투입하여
 - 기업 및 외자유치, 취업서비스 지원, 사회적 일자리 등을 통해 지금까지 61,427개('09.9) 일자리 창출

- 기업 및 외자유치 19,166개
- 사회적 일자리 32,035개
 - 사회서비스 일자리 9,023, 공공근로 4,600, 희망근로 10,438, 자체재원절감 4,300, 기타 3,674
- 취업지원서비스 8,962개
 - 구직알선 8,277, 고용보조금 지원 685
- 청년취업 312개, 기업환경 조성 70개, 공공기관 고용 40개, 지역건설 지역건설사업 842개

- 특히, 지난 2월 자체예산 680억원을 절감하여
 - 경제가 어려워질 때 가장 먼저 고통을 받게 되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전용하였음
 - 절감된 예산 중 400억원을 투입하여 실직자, 휴폐업자영업자,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신규일자리 4,300개를 창출하였고, 280억원은 위기가정 생계 안정사업비 등으로 지원하였음

<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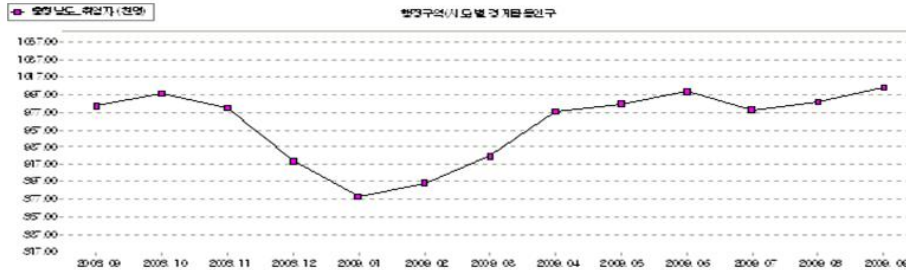
- 청년인턴 170개, 지역자활센터 인력지원 160개, 배움터지킴이 240개, 노인실태조사 인력지원 470개, 클린코리아 공공근로 430개, 숲 가꾸기 798개, 보육시설 보충교사 1,373개 등

- 청년실업 해소 정책으로
 - 이공계 기술연수, 전략산업 전문기술 인력과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6개 사업에 13억원을 투입하여 415명의 취업을 지원
 - 道內 대학을 통한 인력양성 산학 협력사업(9개대학 146억원)을 추진해오고 있음

- | |
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이공계 졸업미취업자 전문기술연수 60명 257백만 ◦ 수요자중심 산업인력양성 105명 540백만 ◦ 행정기관 청년 인턴십 1,052명 9,987명 ◦ 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 200명 55백만 |
|---|

- 이와 별도로 노동부, 지식경제부 등 중앙정부시책과 연계하여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 대책 추진
- 다) 이와 같은 노력결과, 실업률 안정기조로 전환
- 지난 1월 취업자격 거정을 통과한 후 지속 증가하여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수준 회복

□ 고용지표 변동추이 〈 취업자 〉



〈 실업률 〉



IV 지역고용정책의 한계와 개선방향

-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는 창출사업은 대부분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
(희망근로, 공공근로, 사회서비스일자리 등)위주 로 추진되기 때문 지속적인 고용 한계)
- 양질의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고용확대 필요
- 지방의 고용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
 - 기업의 지방이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과 중앙에 집중된 고용관련 권한의 이양 필요
 - 중앙 : 고용정책 수립 및 전국 통일적 시책 및 예산지원
 - 지방 : 지역실정에 맞는 고용 및 실업대책 추진

V 향후 역점시책

⌞

- 지속적인 기업유치 및 외자유치 활동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
-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
- 산·학·관·연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인력수급 부분적 미스매치 해소
-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근로능력에 따라 분리 대응
 - 근로능력자 : 직업훈련 등 적극적 고용시장 진입유도
 - 근로무능력자 : 사회안전망에 의한 복지혜택 확대
- ▷ 장기적으로 일자리 총량확대, 단기적으로 미스매치 해소 및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구축에 역량 집중

, ⌞

- 취업정보제공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실시간 취업정보
 - 노동부, 지자체, 노사단체, 대학, 기업, 훈련기관, 인력개발원, 민간취업포탈 연계
- 산학협력 강화로 기업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
-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컨소시엄 운영
 - 중소 및 벤처기업 전문직종 맞춤형 인력양성
- 고용효과가 큰 양질의 지방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
 - 의료·컨벤션 산업 육성, 관광인프라 구축 등

감 사 합 니 다